

## 예타, 균형발전 막고 광주·전남 쇠락 '결정타'

### 예타당성조사 전면 개혁돼야

광주일보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예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생긴 이래 21년간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집중됐는지를 분석했다.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미래산업 및 연구개발시설, 지역혁신사업 등에 필요한 국가 예산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광역자치단체가 두 곳 이상이 연계된 초광역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을 참여 자치단체 수로 나눠 배정했으며, 연구개발(R&D) 사업, 정부부처사업 등은 기타로 분류했다. <관련기사 3면>

### <1> 10년간 극심한 차별

지난 21년간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들 가운데 5분의 3 이상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영남권이 정부 재정으로 기반·편의·미래시설들을 신속하게 갖추면서 인구·경제 성장이 가능했으며, 국가 전반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이전까지 예타 사업의 지역별 통제조차 작성하지

지난 21년간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 5분의 3이 수도권·영남권서 추진  
인구·경제논리 아닌 낙후지역에 재정 집중하는 '신 불균형 정책' 시급

않을 정도로 균형발전엔 무감각했다. 광주·전남은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통과됐고, 문재인·노무현 정부에서도 일정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건수 및 예산이 급감했다. 10년간 '차별'이 지역의 쇠락과 직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또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취지로 도입된 예타 제도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낙후지역에 정부 재정을 더 집중하는 '신 불균형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광주일보에 공개한 '1999~2020년 예타 및 예타면제사업'에 따르면 21년간 전국적으로 모두 618건(지역 중복 포함) 280조 3231억원(역원 미반 삭제)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됐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정부부처 직접 사업 등에 해당하는 '기타'가 83건에 33조1633억원에 해당된다. 이는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충청권, 수도권에 주로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를 제외하고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에서는 21년간 104건 36조2543억이 통과됐다. 예산으로 따져보면 전체의 14.67%다. 이에 반해 수도권 142건 86조5914억원으로 35.04%, 영남권 175건 65조4966억원으로 26.50%를 차지했다. 대규모 사업 예산의 61.54%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것이다. 충청권은 74건 34조6916억원(14.04%), 강원·제주권은 33건 24조1259억원(9.76%)였다.

광주·전남으로만 한정해서 살펴보면 70건(26조 761억원)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광주 1건(3586억원), 전남 18건(9조8619억원) 등 19건 10조2205억원(23.56%)으로 최대치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광주 6건(2조5916억원), 전남 11건(3조8610억원) 등 17건 6조 4526억원(11.68%), 문재인 정부 광주 2건(1조 2581억원), 전남 9건(3조6768억원) 등 11건 4조 9349억원(10.22%)으로 10%대를 유지했다.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2009~2017년)에서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주 6건(2조 4652억원(5.68%))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에 더해 광주 4건(6579억원), 전남 4건(3178억원) 등 11건 9757억원(2.51%)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 재정 투자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영남권의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한 반면 광주·전남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격차를 보이면서 제 때 기반·편의·미래시설을 갖추지 못하면서 더 쇠락했다고 볼 수 있다.

충청권은 노무현 정부 23.85%, 문재인 정부 18.62%, 영남권은 이명박 정부 29.66%, 박근혜 정부 26.37%에서 최대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지금까지는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권이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산업 소외, 과학기술 예산 투입 저조, 연구개발기관 전무 등 지역혁신 역량 부문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낙후지역을 우선하는 가정 '신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시설별 방역수칙은 강화

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세가 심한 전북과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등은 2단계로 상황조정할 예정이다. 또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를 시행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2면>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시설별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광주시 등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광주시도 자체적으로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영업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중단토록 하고, 종교활동은 좌석수를 현 50%에서 30%로 제한 하는 등 강화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두환 단죄의 날

### 오늘 광주지법,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선고 공판

"5월 21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 도청 쪽에서 사적공원 쪽으로 헬기가 날아가면서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연속 3차례에 걸쳐 지축을 울리는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 <故> 조비오 신부·국회광주신상조사특별위원회(1989년) 정문회 중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년이 흘렀지만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두환씨는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30일 오후 2시, 5·18 민주화운동 '그 날의 진실'을 확인하는 선고 재판이 시작된다.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씨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하를 끊어버리는 계기가 될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형벌이 내려질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3월과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부인 이순자씨는 동석신청을 하

지 않아 법정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가리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선고 형량과 헬기 사격 존재 및 전씨가 알고 있었느냐 여부다. 선고량은 담당 판사를 제외한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예측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헬기사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헬기사격 존재 여부는 술한 증언에도, 5·18 때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한데다 전씨에서 이번 법적 판단에 대한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 1995년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헬기사격은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경호를 위한 철제 펜스와 촬영 구역 등이 설치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재판부는 이번 선고 재판과 관련, 생중계를 통해 5·18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이 5·18의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선고 전 법정 영상·사진 촬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지산동은 골목까지 주차 전쟁 중 ▶7면  
KIA 황대인, 기대주에서 대형주로 ▶18면  
건축물열전 - 양주시시장장준진미술관 ▶22면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11.06 - 11.30  
온라인 쇼핑몰 운영 NAVER | 영남문화재단 | 011  
조직: 조진, 광주일보, 매일신문사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생명영광의 땅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대한민국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로 이루겠습니다.”

전남의 새로운 바람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48조 5천억원 투자, 450개 사업·육성  
상생형 지역 일자리 12만여 개 창출,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라남도 JeollaNamdo